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보험·금융·무역 등 '새 지평'

## 디지털화폐 CBDC 온다

### (中) 산업혁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기록 가능  
위조나 해킹 없이 안전하게 처리  
서류미비 근절 등 혁신 가능성 높아

#. 2035년.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김미란(가명·60세)씨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수술비 일부를 돌려받았다. 6년 전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아 부담으로 잡혀 있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약정이 5년간 추가 치료 사실이 없어 해제된 것이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약정도 많고 복잡한 데다, 눈이 좋지 않아 눈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전혀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스마트계약이 부담보 기간을 체크해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상 여부를 확인, 모바일 지갑으로 보험금을 알아서 지급해 보험료를 낼 때마다 들었던 '돈 낭비'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좋아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되면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프로그래밍해 전자계약서 안에 넣고, 이 계약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무역 프로세스별 스마트계약 효과〉

무역프로세스	당사자	블록체인·스마트계약 효과
거래계약	수출업자-수입업자	신용장자동개설 통지은행 불필요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수입업자 개설은행 수입업자 개설은행→수출업자 통지은행	
신용장 개설 통지	통지은행→수출업자	보험가입 자동화
보험가입	수출업자→보험회사	
수출통관	수출업자→세관	통관서류

다. 블록체인에 과거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발생 시 디지털화폐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보험이다. 현재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앱(app)을 통해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납부영수증,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이다. 이를 받은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사고조사를 진행한 뒤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내, 지급한다.

보험금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단, 서류미비나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계약은 서류미비의 가능성은

줄이고,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 시간을 단축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손해사정사, 정비업체, 병원, 공공기관, 사법기관이 상호 합의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시, 계약서와 진료 내용을 비교, 일치할 경우 사고접수를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처리과정의 위조나 해킹이 없어 주민등록등본, 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스마트계약시 사법기관이 체크한 조건을 통해 보험금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줄어들 수 있다.

◆GPS로 상품 위치 확인...대금지급 무역금융에서도 스마트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시 판매자(수출자)와 구입자(수입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역금융은 국경을 넘어 여러 금융기관(주로 은행)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수많은 관련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이뤄진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방식은 신용장 거래다.

수입자는 물건을 진짜로 받을 수 있을지, 상품은 관창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반대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상품을 받고 돈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이때 수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과 수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한다. 이들기업의 신용을 보증한 은행도 있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수수료다. 신용

장 거래 수수료는 평균 수출금액의 0.11%로 개인적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0.01%)보다 비싸다. 예컨대 수출대금이 5억원일 경우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5만원이지만, 신용장 거래시 5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수입자와 수출자가 스마트계약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위조가 불가해 은행의 수수료 없이 자금송금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반영하면, 수출선박이 안전한 지점까지 운행했는지 확인한 뒤 일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무역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미리 규제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 규제를 확인 스마트계약으로 미리 관세를 지급할 수 있다. 각 국가는 통관서류를 미리 스마트계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통관 기관이 쏠아진다.

조현숙 원광대 무역학 교수는 "앞으로 스마트계약을 통해 상품의 도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하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규제와 관련한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거나 분쟁 해결방법을 미리 합의해 스마트계약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 1면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서 계속

### 가계대출·환율 요동 "내리기 어려운 상황"

◆ 환율 1400원대는 동결 요인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가흐름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은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기준 1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월 5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9000억원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7000억원, 9월 6000억원, 10월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를 못한 이들이 전세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22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오후 3시30분기준)보다 4.3원 오른 1401.8원을 기록했다. 환율 증가는 지난 15일(1398.8원)부터 21일(1397.5원)까지 5거래일 연속 1400원을 밑돌다가 1400원으로 올라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한은은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더 둘 것으로 보인다. 환율을 감안해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CJ그룹, K트렌드 주목...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

## CEO 경영회의

이재현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참석  
경영환경 변화 전망, 성장동력 점검

CJ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CJ인재원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계열사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CEO 경영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8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김홍기 CJ주식회사 경영대표, 허민희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신영수 CJ대한통문 대표이사,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윤상현 CJ ENM 대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그룹 CEO 경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CJ그룹

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글로벌 경제 전망 및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과 '2025년 국내 경제전망 및 주요 산업 트렌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현 회장은 '경쟁력 성장'을 화두로 던졌으며, "글로벌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단기 실적뿐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신제품 개발 등 국내 사업의 혁신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초고령화, 양극화 등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글로벌로 확산한 K트렌드의 기회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K푸드·K콘텐츠·K팝 등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1~2인 가구 1609만개... 전체 67% 차지

## 혼인 미루거나 아이 없이 생활

지난 수년간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집계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10월 말 기준 1011만 개로, 전체 가구(2410만 개)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는 2인 가구(598만 개)였다.

이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1609만 개로 전국 총 가구의 66.7%에 달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992만 개, 584만 개로 도합 1577만 개였다. 당시 전체 2390만 가구의 65.9%를 기록한 바 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에는 1인

(702만), 2인(426만)의 도합 비중이 전체의 54.6%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12.1%p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은 1/2에서 2/3가 됐다. 1, 2인 가구는 2014~2024년 기간 각각 309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지난 10년 사이 3인 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21만 개)했으나 4인 가구는 408만에서 306만으로 100만 개 이상 줄었다. 5인 가구도 42만 개가량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9년 10월만 해도 4인 가구(424만)는 2인(364만)·3인(359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2인 가구는 978만 개

로 전체(1922만)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대가 반영됐다. 또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 소유주는 청년층에 더해 고령층 비중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축인 노인 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